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활동

2021-2024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 목 차 ---

- I "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 이사
승인 취소를 촉구" 보도자료----- 1
- II "교육부, '셀프보수지급'시정명령"공문 -----9
- III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활동"언론보도--11

배포
2024.4.1.(월)

보 도 자 료

보도
2024.4.1.(월)
09:00 이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제목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에 대한 이사승인 취소하라! 총 4 면

발신 :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문의 :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집행위원 김경수(010-9000-5895)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보도로 우리나라 교육정상화에 기여해 오며 불철주야 정론직필을 해 오신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에 대한 이사승인 취소하라!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
이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하며

일정: 2024년 4월 1일(월)~4월 25일(목)

장소: 세종시 교육부 앞(월, 수 08:15-09:00)

평택대학교 정문 앞(화, 목 08:30-09:00)

주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이하, 공공성연대)는 4월 1일(월)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과 평택대학교 정문 앞에서 ‘셀프 보수지급’하고 구성원과 불통하며 대학정상화에 역행하는 이계안 이사장에 대한 이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했다.

공공성연대는 그동안 이계안 이사장에 대해 현 이사회 구성과정과 보수지급을 포함한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계안 이사장은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둬하여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성연대는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는 “상임이사 보수액 책정 관련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상임이사(이사장)의 보수를 책정한 것이 확인”되어,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97, 2024.1.10.).

더욱이 공공성연대는 이계안 이사장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교수들의 승진을 탈락시켜 교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세 명의 교수가 대학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계안 이사장은 의결 되지도 않은 선재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불법 집행했고,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소청권리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공공성연대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고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따라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셀프 보수지급’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에 대한 이사승인 취소하라!

평택대는 임시이사체제를 마치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1년 반 가까이 지났으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사장과 총장이 불투명한 의혹을 감추고 시민,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대는 그동안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동현 총장은 2017-2022년 국고지원사업, 이계안 이사장은 2022년 이사회 구성과정과 본인의 보수지급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2024.1.10.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계안 이사장의 정보공개 거부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에 정관 개정하여 자신이 상임이사로 취임하고 ‘셀프 보수지급’한 이계안 이사장을 규탄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이계안 이사장(개방이사)의 이사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육부 전 차관이 옹호했던 평택대 구재단

구재단에 의해 지배되던 2017년 평택대 대학평의원회 외부위원이 이후 교육부 차관이 되었다.

그는 2017년 당시 공공성강화 교수 대학평의원의 개방이사 선임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구재단이 진행한 절차에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 문제제기는 공공성강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2017년 시작된 소송으로 이어져 불법 개방이사 선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구재단 퇴진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원고: 평택대 교수회 외 1인, 피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 2018다281142, 2019.2.14.).

2. ‘50억 클럽’ 의혹 광상도 전 의원으로 시작된 현 평택대 이사진

국회 속기 회의록(2020.9.20.)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평택대 사안을 장관에게 무리하게 질의했다.

설립자 행세하며 36년간 평택대를 지배했던 구재단 이사장과 직계가족을 몰아낸 제1기(2018-2020) 임시이사들의 거취에 관한 것이었다. 제1기 임시이사들은 일괄 사표를 냈다가 구성원의 요청으로 임기 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곽상도 의원의 질문취지는 왜 제1기 임시이사들의 사표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교육부는 일부만을 교체 요청한 자신들이 파견한 제1기 임시이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원 교체하여 제2기 임시이사회(2020-2022)를 구성했다.

3.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

이계안 이사장은 평택대 제2기 임시이사가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으로 개방이사가 되었다.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에 정관을 개정하여 자신이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본 연대는 보수지급을 포함한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본 연대는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는 “상임이사 보수액 책정 관련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상임이사(이사장)의 보수를 책정한 것이 확인”되어, 이계안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97, 2024.1.10.).

4. 이계안 이사장은 승진적격 교수들을 전례 없이 탈락시켰다.

이계안 이사장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교수들의 승진을 탈락시켜 교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세 명의 교수는 대학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학교를 떠났다.

이계안 이사장은 “회의에 불참한 교원들에게 페널티가 필요해 보이고, 이를 위해 이번 승진 탈락을 통해 명백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사회에서 발언했고, 이사회는 해당 교수들의 승진탈락을 결의했다. 자율적 참여 행사인 해당 회의에 대해 교원준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승진적격으로 판단한 교원인사규정을 무력화시켜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5. 이계안 이사장은 정보공개 주도한 선재원 교수를 불법 징계했다.

이계안 이사장은 의결 되지도 않은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불법 집행했고,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소청권리를 박탈했다.

교내 법무감사팀에 10번에 걸쳐 반복한 익명의 ‘비공개’ 신고로 추진된 징계는 이사 정수 9인 중 5인이 찬성해야 적법한 의결이었으나, 당시 이사회에는 5인만이 출석했고, 출석한 5인 이사 중 이사 1인은 징계의결을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선재원 교수는 불법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7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이계안 이사장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이상과 같이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고,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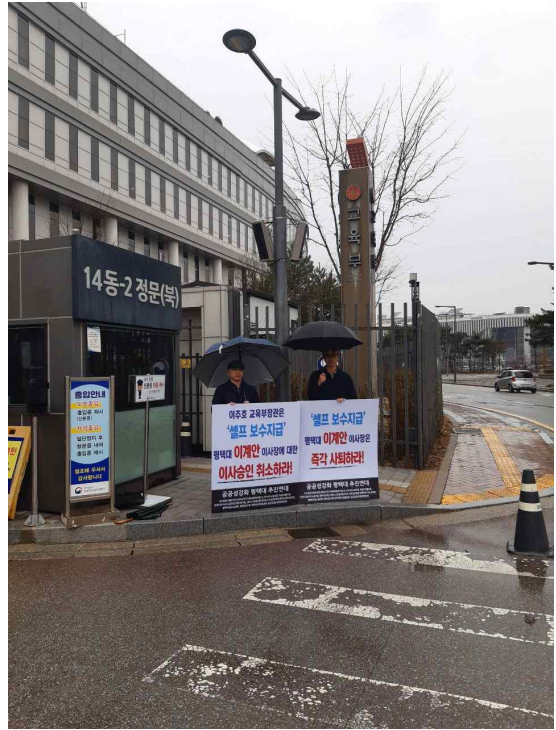
따라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2.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을 취소하여 사학혁신 선도대학 평택대가 정상화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4년 4월 1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학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교 육 부

수신 학교법인피어선기념학원이사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상임이사 보수액 책정 관련 후속조치 요구

1. 관련

- 가.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관할청)
- 나.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1AA-2312-0197764)
- 다.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피어선-11('24. 1. 3.)

2. 학교법인 상임이사 보수액 책정 관련 사립학교법상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상임이사의 보수가 과다 책정되어 법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및 정관의 위임을 받은 내규 등을 통해 그 액을 정하거나 관련 근거 규정이 없을 경우 상임이사의 선임 목적 및 학교법인의 재무상태, 상임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로써 보수액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1AA-2312-0197764) 관련 귀 학교법인의 소명자료 검토 결과, 상임이사 보수액 책정 관련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내부결제만으로 상임이사(이사장)의 보수를 책정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즉시 상임이사 보수 책정 관련 이사회 의결(사후 추인)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사립학교법 제16조 등에 따라 상임이사는 자신의 보수액 책정 의결 시 제척 대상임에 유의

교 육 부 장 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대 학 경 영 혁 신 전 결 2024. 1. 5.
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대 학 경 영 혁 신 지 원 과-97 (2024. 1. 10.)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14동 (어진동) / 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954 팩스번호 044-203-6066 / mangyg1@korea.kr



“비리 조치 요구했더니 돌아온건 보복해직”

선재원 교수 “평택대,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공영대학 전환에 노력할 것”

기사입력시간 : 2021/12/06 [18:12:00]

김아름내 기자



▲ 피어선 빌딩 앞에 서서 발언하는 평택대 선재원 교수 © 법률닷컴

사학비리를 공익 제보한 교수에 대한 보복해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재원 교수 보복해직 철회와 평택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6일 오후 광화문 피어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임시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투쟁위는 선재원 교수는 2017년부터 평택대를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공영대학으로의 전환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위에 따르면 최근 조기홍 전 평택대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 반으로 징역 2년을, 기획본부장과 총무처장을 지낸 자녀들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종합감사를 통해 전산시스템 도입과 건물신축 등 총 94억 원의 교비횡령비리 의혹이 밝혀졌다.

선 교수는 관련 비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의 보복해직을 당했다고 공동투쟁위는 전했다. 모 교수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받은 것. 면담 및 자료에 따른 검토 결과 선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평택대 임시 이사장 및 이사회는 선 교수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 2021년 12월 6일 선재원 교수 보복해직 철회와 평택대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 법률닷컴

공동투쟁위는 선 교수는 즉발사학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평택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교육적 목적이 충실한 대학을 만들어가고자 했지만 해임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임시이사장이 조 전 이사장과 이사 등의 복귀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귀의 발판을 제공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재원 교수의 보복해직 철회와 임시이사장의 전 이사장 비호 중단을 촉구했다.

선재원 교수는 “평택대 교내 구성원과 지역시민은 대학의 혁신공영대학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드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법률닷컴 김아름내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임시이사 교체 촉구

윤 이명아기자 | 승인 2022.01.17 19:09

-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불법해임과 학사혼란을 초래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평택대학교 임시이사 교체 촉구



평택대학교 정문. 사진=평택대 제공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월 17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이끈 선재원 교수를 불법해임하고 구재단 이사 복귀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택대학교 2기 임시이사회의 교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에 평택대학교 이사회가 행한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지회장 선재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현 총장직무대행은 교비횡령과 임용비리로 이사 승인이 취소되고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되기까지 한 조기홍 전 이사장을 장기간 교무위원으로서 비호했던 교수를 인권센터장과 성고충심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사회는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했고, 징계위원회는 선재원 교수가 제기한 해당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도 거부하고 해임을 결정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평택대학교 임시이사회가 구재단 복귀를 돕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법인에 조기흥 전 이사장의 5억여 원에 달하는 교비횡령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임시이사회는 총장직무대행과 짜고 조기흥 전 이사장의 재직 시절 이사회 감사와 이사를 장기간 지내고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에 의해 함께 승인이 취소된 이사에게 횡령금액의 대납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조기흥 전 이사장이 제3자의 이름으로 반납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구성원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은 조기흥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해당 이사까지 정이사 복귀를 준비하려는 기획으로 이해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개최될 회의에서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여 대학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평택대학교 2기 임시이사 전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해임과 학사혼란을 저지르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평택대학교 임시이사를 즉각 교체하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에 평택대학교 이사회가 행한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 장 선재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의 본분을 망각하여 지속적으로 학사 혼란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대학정상화를 이끌어 왔던 선재원 교수를 불법 해임한 평택대학교 임시이사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

평택대학교 이사회와 교무위원 등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린 12월 22일 오후에 '총장 이메일'로 전국의 보도기관과 교내 구성원에게 선재원 교수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보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내용을 소청심사 결정 이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사실확인서로 제출했다. 평택대학교 이사회 및 교무위원, 그리고 이들이 작성한 성명서에 연명한 단체들이 선재원 교수에 대한 불법적 해임과 명예훼손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임시이사회는 파견 직후 2021년 1월에 자신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당시 총장직무대행을 해임하고, 동시에 조기흥 전 이사장의 재직시절 장기간 보직교수로 지냈던 김문기 교수를 개최 공지 없는 밀실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조기흥 전 이사장이 설립하고 조기흥 처남이 이사장이었던 장학재단의 현재 이사이며 조기흥 전 이사장의 총장 재임시절 장기간 교무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종래 정관이 총장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해 놓고 있어서 이사회는 스스로 직무대행자 임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조기흥 전 이사장은 구 재단의 대표자로서, 2018년에 자녀의 본교 임용 비리와 교비횡령 등으로 이사승인을 취소당했고, 직원에 대한 성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구재단에 기여했던 이들을 대거 보직에 임명했다. 임시이사회는 교육부 종합감사로 부당 임용 및 승진이라는 비리가 밝혀지고 조기흥 총장 재직동안 장기간 교무위원을 지냈던 이동현 교수를 기획평가처장과 사학혁신지원사업 단장으로 임명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지회는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이사회에 수차례 알리고 대학정상화를 위해 보직해임을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했다.

선재원 교수에 대한 해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조기흥 총장 재임시절 장기간 교무위원을 지냈고 조기흥 비리를 취재하여 보도한 2017년 KBS 추적60분 방영저지를 주도한 조현수 교수를 인권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선재원 교수에 대해 출석조사를 요구한 당일 오후에 조현수 교수를 성고충심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대학심리상담원장으로도 임명했다. 상담전공 교수를 임명해왔던 대학심리상담원장직을 전례 없이 경제학전공 교수로 임명한 것이다. 조현수 교수가 위원장인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선재원 교수를 중징계 의견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조현수 교수는 징계위원의 직을 겸하여 선재원 교수의 징계 해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선재원 교수 법률대리인은 조현수 교수가 선재원 교수와 이해관계대립자이기에 기피신청했으나,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대부분 수용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거부했다.

임시이사회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달라는 선재원 교수의 공개서한을 무시했다. 더욱이 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신고인과 선재원 교수를 면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단 위원 전원일치 의견을 전달한 것도 무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사회의 해임결정 당일 사전에 이사장과 면담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 중에 한 이사가 선재원 교수 해임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견과 본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심의 결과가 정반대이고, 교내분란과 관련한 보복성으로 여겨져 대학정상화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사회는 결국 무리하게 해임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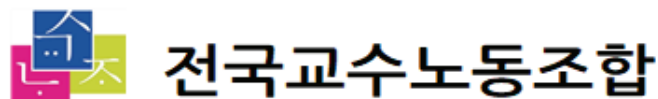
더욱 심각한 것은 평택대학교 임시이사들이 구재단 인사의 복귀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법인에 조기흥의 5억여 원의 교비횡령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명한 바 있다. 그런데 임시이사회는 총장직무대행과 공모하여, 조기흥의 재직시절 이사회 감사와 이사를 장기간 지냈고 2018년 교육부 실태조사에 의해 함께 승인이 취소된 이사에게 그 횡령금액을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추진하여 대납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흥이 자신의 이름으로 횡령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제3자의 이름으로 반납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구성원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은 조기흥 뿐만 아니라 해당 이사까지 정이사 복귀를 준비하려는 기획으로 이해된다.

임시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은 구재단 이사에 의한 대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8월 12일 ‘구성원대표들’과의 의견 수렴회를 가졌다. 그러나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지회 및 조기흥 전 이사장 사퇴를 주도한 교수회, 그리고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지부가 참석하지 않았고 실제 참석자들은 주요 단체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의견수렴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장직무대행이 구재단 이사에게 대납을 설득했고, 법인 사무국장, 총무처장 등을 지내면서 조기흥의 재직시절 실세였고 2019년 제1기 임시이사회에 의해 해임되었던 조기흥의 딸이 대납 예정자인 구재단 이사를 찾아가 ‘살려 달라’고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30일 이사회에서는 구재단 이사가 법인에 대납하면 법인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취하하고 부동산 가압류 설정 말소를 신청한다는, 임시이사장, 조기흥, 대납 예정자와의 합의서가 보고되었다.

구재단 이사에 의한 조기흥의 교비횡령금액의 대납은 1월 20일에 예정된 조기흥과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이고 조기흥이나 대납자가 정이사체제 전환 시에 실질적인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이후 이사회를 장악해 나갈 것이 우려된다. 법인사무국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흥의 조카와 대학본부의 교무평가부처장인 조기흥 조카사위 및 행정지원처 총괄지원팀장인 조기흥 조카가 이 과정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와중에 임시이사회는 오늘(17일) 총장직무대행을 정식 총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개최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상과 같이 임시이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여 평택대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학교) 임시이사를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와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제1항에 의거하여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로의 교체를 결정해야 한다.

2022년 1월 17일



저작권자 © 대학지성 In&Ou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아 기자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 기자회견 열고 공익이사 추천 촉구

윤 안노연 기자 | ㉠ 승인 2022.02.14 16:17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기여자에 대한 이사 추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 제공

평택대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이사후보 추천을 두고 학교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구 재단 관련자 등에 대한 이사 추천에 반대하고 나섰다.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이하 연대)와 전국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평택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4일 평택대 정상화 진행을 결정, 오는 21일 정상화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는 대학 구성원 등을 통해 이사 정족수 9명의 2배수인 18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9명을 정이사로 결정한다.

연대는 “구성원 동의 없이 재정기여자를 정이사로 추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평택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정기여자는 법적으로 추천 불가하고 교육부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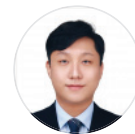
이어 “평택대는 인천대 모델에 따라 국립대 법인을 추진하는 등 혁신공영대학 추진을 위해선 정이사 체제가 이에 동의하는 이사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홍 전 총장 관련자와 재정기여자에 대한 이사 추천 반대, 공개토론회 제안 등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문기 총장 직무대행은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학교공동체 의견을 따라 법인 정상화추진위가 이사회 후보 추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노연 기자

홈 > 뉴스 > 뉴스 > 교육

피어선기념학원, 김문기 평택대 총장대행 임기 연장

2022년 03월 02일 (수)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3월 1일자 인사 단행, 부총장에 이동현 교수 총장직무대행 정관 변경, 사학혁신추진위 비판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평택대학교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피어선기념학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3월 1일 자 발령으로, 김문기 평택대학교 총장직무대행에 대한 임기 연장과 이동현 기획평가처장의 부총장 선임 건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획평가처장에는 이상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도서관장에는 김정원 취창업지원단장이 선임됐다.

신임 취창업지원단장으로는 최혁준 국제물류학과 교수가 선임됐으며, 산학협력단장에는 이태규 ICT융합학부 스마트 콘텐츠전공 교수가 선임됐다.

피어선기념학원은 정년을 맞이한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는 지난 2월 8일 열린 제207회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건을 논의한 뒤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 “총장직무대행의 경우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는 그 이유로, 평택대학교가 정이사체제로의 전환과 총장선출제도가 결정되는 과도기를 벗어날 때까지 현 총장직무대행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대학교 사학혁신추진연대는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평택대학교 사학혁신추진연대는 2월 28일 성명을 통해 “강제상 임시이사장은 파행적 이사회 운영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어선기념학원의 인사에 대해 “법인사무과장, 대학본부 교무부처장, 수업팀장, 총괄지원팀장을 이미 조기홍 조카 등 친인척으로 배치했다”며,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조기홍 체제를 연장하는 강제상 이사장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 강제상 이사장은 임기가 한 달 남은 현시점에서 정관을 변경해 김문기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유지시키는 진짜 이유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평택시사신문(<http://www.ptsis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평택대 선재원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에 “정이사체제 전환토록 도와달라” 호소

기사입력시간 : 2022/03/28 [11:51:00]

김아름내 기자



▲ 평택대 선재원 교수 ©신문고뉴스

[신문고뉴스] 김아름내 기자 = 구 재단 퇴진운동을 벌이다가 이사회를 통해 해임, 최근 복직하게 된 평택대 선재원 교수(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장)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평택대에 유능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선재원 교수는 “평택대는 3년간의 임시이사체제를 거쳐 36년간 족벌사학체제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려 한다”면서 “앞으로의 100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이사 구성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평택대학교가 자생력이 있음에도 총장직무대행과 부총장은 ‘재정기여자’ 영입방향으로 교내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2021년 대학알리미 공지에 따르면 평택대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204%로, 연세대의 210%에 이어 174개 대학 중 21위이라고 설명하고 “평택대의 수익용 재산은 서울 광화문, 경기 안성, 충남 서산의 토지 등으로 구성돼있고 서울 광화문 수익용 재산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의 640억 원으로 알려진다”고 덧붙였다.

선 교수는 평택대학교가 총장직무대행 등 대학본부가 주장하는 만큼 학교의 재정적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적자 예상금액은 구재단이 2017년 ICT공학관 건설할 때 높은 이자율로 빌린 대출금 상환액과 비슷하며 2017년까지는 재정적자가 없고 적립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본부가 ‘임금 체불’ 가능성을 비친 가운데 선재원 교수는 “구성원의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작년에 직원 임금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토지, 건물, 주식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이다.

선 교수에 따르면 평택대는 2016년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1%로 151개 대학 중 123위다. 2021년에는 0.9%를 보였다.

선 교수는 사학분쟁조정위에 “평택대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사 선임을 요청하면서도 재정 기여자가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평택대 정이사체제 전환 결정도 전에 대학본부에서는 재정기여자를 언급했다”고 지적하고 총장장직무대행과 부총장이 학교를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특별기고] "평택대 100년, 사분위 위원께 달렸습니다."

U's Line | 승인 2022.04.07 15:18

평택대 사학혁신에 앞장 서왔던 선재원 교수의 사분위 청원 기고
가짜설립자 조기흥 36년 족벌 종식 목전, 난데없는 '재정기여자 영입' 추진
아직 남은 조 씨 잔재세력 음모...구성원, "올곧은 정이사 선임 학수고대"

평택대 사학혁신 앞장 해임·복직, 선재원 교수 청원

저는 교수로서 자기검열하며 학교운영의 부조리에 대해 입 닫고, 밤샘 아르바이트로 강의시간에 조는 학생들의 처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평택대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동료교수들과 비민주적이고, 족벌로 학교 주요보직을 장악해 학교발전을 꾀할 수 없도록 그들끼리 30여년간 장막을 쳐 놓은 구재단으로는 미래 인재양성,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교감, 교수자들의 세상을 위한 진지한 연구 등 너무나도 중요한 대학기능을 도저히 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재원 평택대 교수(국제지역학부)

당시 저를 포함한 몇몇 동료교수들은 정상적인 대학으로 학교를 돌려놔야 한다는 책임감과 조바심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교육자적 양심은 당연히 구재단퇴진 결의로 이어졌고 계속되는 학교와의 싸움 속에 교육자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강단까지 빼앗기는 부당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복직은 이뤘지만 평택대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평택대가 한 치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분위원회들께서 내린 결정에 따라 시작된 평택대의 3년간 임시이사체제는 끝이 보입니다. 이제 임시이사체제를 곧 마치고 36년간의 족벌 사학체제를 뒤로 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벅칩니다. 그러나 한편

으로, 올해 개교 110주년을 맞은 뿌리 깊은 나무 평택대가 36년간 설립자 행세를 해 온 가짜 설립자 조기흥의 사리사욕 족벌체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100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벅찬 시간에 평택대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불순한 의도가 몰려와 구성원들은 새로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다름아닌 총장직무대행과 부총장이 난데없이 평택대에 '재정기여자'를 영입해야 한다며 교내 여론을 몰아가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할 임시이사장은 묻지마식 재정기여자 영입에 함께 나서 본분이 분쟁조정자인 임시이사장이 오히려 사학 분쟁을 조장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정이사가 들어오기 전에 재정기여자 영입에 마치 당위성이나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술책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들이 왜 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발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이사체제에서 재정기여자 영입을 운운하는 것은 이미 그들끼리는 물밑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난데없는 '재정기여자' 영입 운운, 검은 거래 의혹

올해 예상하는 평택대의 재정적자는 구재단이 2017년 ICT공학관 건설할 때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높은 이자율로 빌린 대출금 상환액과 비슷합니다. 2017년까지 재정적자는 없었고 적립금이 있었습니다. 대학본부는 임금을 체불할 수 있다고 불안을 조성했지만, 구성원의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직원 임금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없었습니다.

위기의 대학환경 넘을 자생력 갖춘 대학

평택대는 대학알리미 2021년도 공지에 따르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204%로 174개 대학 중 21위 학교입니다. 평택대 수익용기본재산은 서울 광화문, 경기 안성, 충남 서산의 토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용 재산으로 경기 남양주에 1만여평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수익용기본재산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64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수익용기본재산, 정상운영으로 해소

평택대는 대학재정알리미 2016년도 공지에 따르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율 1%로 151개대학 중 123위입니다. 2021년도에는 0.9%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소명의식 있고 유능한 정이사가 선임되고 구성원의 집단지성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단기 재정적자 구조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조기흥 가짜 설립자였기에 전 직원 족벌구축

국가기록원 공문서에 따르면, 1981년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학교)은 재단법인 피어선기념성경학원유지재단의 재산 전액의 무상양도로 설립됐습니다. 종교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한 일은 당시 법인에서 월급쟁이 사무국장이던 조기흥 씨가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 씨는 이후 이사장(1981-1995)과 총장(1995-2016, 이사 겸임)으로 지내며 측근의 도움을 받으며 설립자 행세를 했습니다. 조 씨의 비리는 KBS 추적60분 ‘총장님의 이중생활 36년’(2017)과 뉴스타파 ‘모두가 가해자의 사람들’(2018)에서 자신이 설립자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1기 임시이사회(2018.11.-2020.11.)는 교육부 실태조사로 비리가 밝혀진 전 법인사무국장, 기획처장, 공간조형연구소장인 조씨의 딸들과 아들을 해임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비리를 근거로 각각 실형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1기 임시이사회의 법인종합감사에 따르면, 조 씨의 총장퇴임 직전에 94억 교비횡령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수사)에서 수사중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저하의 주요원인으로 밝힌 광화문 피어선빌딩의 57% 매각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임시이사장, 총장장직무대행, 부총장 도넜은 전횡

조 씨의 총장시절 장기간 교무위원을 지냈던 총장직무대행과 부총장이 ‘재정기여자’ 영입방향으로 교내 여론을 몰아가는 두 축입니다. 제2기 임시이사장(2020.11.-2022.11.)은 정관을 변경해 현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했고, 정관을 재차 변경해 정년이 지난 총장직무대행의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부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임용과 승진 비리의 당사자입니다.

임시이사장은 조 씨의 친인척들이 법인과 대학본부에 직원으로 배치된 것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질문에 대해 “이제는 ‘리셋’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공식석상에서 답변했습니다. 제1기 임시이사회 법인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교비횡령 수사가 진행된 것도 제2기 임시이사장, 총장직무대행, 부총장이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진실을 가리려는 획책을 꾸리려 해 구재단 퇴진운동을 주도한 교수들이 공익신고로 맞섰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분위 위원 판단이 평택대 100년을 결정

94억은 1300명 학생들이 여름, 겨울방학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학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시는 이런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 직원, 교수들은 ‘재정기여자’를 영입하면 구재단의 불공정한 운영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기여가 정이사 선임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지속적인 사학혁신을 단행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교비횡령을 막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율을 높여 단기적인 재정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대는 비리 사학에서 탈출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사학혁신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분위 위원님들의 속 깊고, 앞을 내다보는 결정이 많은 것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평택대 교육공동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께서 교육적 소명의식이 남다르고, 학교여건이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평택대로 발전시켜 우리 평택대 학생들이 어깨를 펴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으로 변모시킬 유능한 정이사가 선임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평택대 전 구성원이 환호성을 지를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U'sLine news@usline.kr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 “평택대 임시이사회, 총장직대 정년연장 정관 변경” 시정명령

문유숙 기자 | 승인 2022.04.21 01:47

교육부 “학교법인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다”며 정관 원상복구 조치
평택대 교수노조 “임시이사, 조기흥 최측근 총장직대 정년연장” 납득 안 돼



평택대가 정이사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재정기여자 영입, 구 재단 관련자 등 이사회후 추천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택대 사학혁신연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정년 퇴임을 앞둔 총장직무대행의 정년 연장을 위해 정관변경을 시도한 임시이사회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며 원상대로 시정조치하라는 교육부 명령이 이뤄졌다.

19일 평택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평택대 임시이사회 체제 상황에서 정년을 앞둔 김○○ 총장직무대행의 정년 연장을 위해 연령제한이 없도록 정관변경을 시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원상복귀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교원(총장직무대행)의 정년”을 학교법인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정관 제82조(총장 등)

현행	개정	검토결과
제82조(총장 등) ①~③ 생략 ④ 총장 및 부총장이 유고 시에는 교무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입학학생처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총장이 사직하거나 직위해제 및 해임될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총장 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개정 2013.12.17., 2017.02.16.> <삭제 2019.03.22.> <개정 2019.10.25., 2020.05.25., 2021.01.11.>	제82조(총장 등) ①~③ 생략 ④ 총장 및 부총장이 유고 시에는 교무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입학학생처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총장이 사직하거나 직위해제 및 해임될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총장 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u>선임된 총장직무대행은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u> <개정 2013.12.17., 2017.02.16.> <삭제 2019.03.22.> <개정 2019.10.25., 2020.05.25., 2021.01.11., 2022.02.08>	시정

평택대 임시이사회에서 정년을 앞둔 총장직무대행 정년연장 정관변경은 적법하지 않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임시이사회에서 지난 2월 정관변경한 개정안.

평택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 총장직무대행이 65세 정년교원으로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총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유권해석해 정년을 두지 않도록 정관변경을 하려다 몇몇 이사가 이 임시이사회로서는 무리수라고 반대했지만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수노조 평택대 지회는 “이사회 이사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정관변경을 강행한 임시이사장 행위는 대학정상화를 앞둔 평택대로서는 학교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해교행위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임시이사장 해임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정관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김○○ 총장직무대행 정년제한을 없애려 했던 이유를 임시이사회에 물은 결과, “학교행정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이사체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수노조 평택대 지회 관계자는 “총장직무대행 김문기 씨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 교비횡령 의혹을 공익제보한 측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조기흥 측근이다. 어찌보면 평택대 임시이사 파견 학내 분규에 일정 책임이 있는 자를 임시이사회가 정관변경이라는 무리수를 뒤 정년연장하려 한 행위를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파견한 분규조정자들이 맞는지 의문이 간다”고 성토했다.

평택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오는 27일 총장직무대행 정년연장 정관변경 교육부 시정조치 등에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택대 구성원 “교육부, 임시이사 전원교체” 촉구...정관변경·허위사실 유포 등 신뢰상실

✎ 박병수 기자 | ㉠ 승인 2022.05.04 23:48

2기 임시이사회 선임 직후부터 구성원과 마찰
교수노조 “사분위 파견 조정역할 보다 구성원간 갈등조장”
평택대 구성원 “임시이사회 전원교체로 신뢰회복 급선무” 제기



그동안 평택대에 파견된 임시이사회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잦은 비판이 잇따랐던 가운데 정관변경 총장직대 정년연장, 재정기여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평택대 구성원들은 임시이사회 전원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월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가 재정기여자 유치는 제2의 조기홍 세력을 끌어들이는 술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평택대 구성원 “무엇 하러 온 임시이사회?” 의혹 증폭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임시이사 체제인 평택대가 최근 잇따라 교육부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대학 정상화가 본연의 역할인 임시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친 업무행태를 보인다는 그동안 구성원들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평택대 구성원들은 그동안 중립과 공정해야 할 임시이사회가 구 재단의 의견에 경도(傾倒)된 행태를 취한다며 '강제상 임시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다 조기흥 총장 시절 교무위원을 지낸 김문기 평택대 총장직무대행의 정년퇴직을 임시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정년을 연장하려다 지난달 19일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회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며 원상복귀 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관변경 당시 임시이사들 중에는 "임시이사회가 정관변경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며 반발했지만 강 이사장 등이 강행했다는 후문이 알려지면서 임시이사회에의 돌출행동에 학내 구성원들은 당연히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됐다.

대학사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근거 무시 등 행정조치 필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지난 달 27일 평택대를 방문해 정상화 실태파악 평택대 구성원 면담과정에서 교육부는 "재정기여자에게 이사직 부여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재정기여자 확보 위한 절차연기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대 정상화위원회와 학교법인 등의 '재정기여자 유치' 대한 집착이 '법적근거를 무시한 재정기여자 관련 요청'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를 한 사실이 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가 '평택대 정상화 관련 교육부와 학교법인 논의사항 공유요청'한 민원에 관한 교육부 답변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정상화위원회가 '재정기여'에 관련해 교육부와 논의했다고 한 부분 ▲교육부와 피어선기념학원이 '재정기여방식'에 대해 논의하거나 '재정기탁자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부분 등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혀 임시이사회가 평택대 정상화에 교육부와 궤과 크게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비난과 교육부의 상응한 행정조치가 발동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기여자 운운하는 사람' 정상화 역행자?

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는 "대표성도 추인받지 않았고, 학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균형감을 잃은 '평택대 대학정상화위원회'는 평택대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시기에 심각한 명예실추를 저질렀다"며 "평택대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평택대 대학정상화위원회'의 자의적인 행동에 교육부는 일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교수노조 평택대지회는 "재정기여자 유치가 지역과 상생하고,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려는 평택대의 계획에 옳바르고, 적합한 방법인 지에 대해 평택대 구성원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부만의 선부른 주장"이라며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판별되기 전에 재정기여자로 밀어부치려는 세력을 평택대 구성원들은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을 뿐 아니라, 평택대를 특정집단이 장악하게 하려는 음모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는 우선 공익성·민주성·개혁성이 검증된 정이사가 사분위를 통해 선임돼 지역과 상생하는 평택대로 갈 수 있는 '혁신공영대학' 추진이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40여년 족벌체제와 같은 또다른 세력이 평택대를 장악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대 임시이사회, 총장직무대행 임명 철회하라” 촉구

기사입력시간 : 2022/05/18 [10:39:00]

김아름내 기자

[신문고뉴스] 김아름내 기자 = 평택대학교 사학혁신추진연대는 평택대학교 임시 이사회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18일, 지난 4월 27일 임명한 총장직무대행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는 “강제상 임시이사장은 제211회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이후 자격 없는 총장직무대행의 제청으로 부총장으로 임명된 이동현 기획평가처장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면서 “이사들의 반대를 거부하고 정관을 위배하며 임명한 것으로, 지난 2월 불법 정관개정으로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아 초래된 학사파행을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동현 총장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구재단에 의한 재정적자 원인은 언급없이 구성원에게 임금체불 우려를 퍼뜨리며 재정기여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진연대는 또 “이 씨는 1차 모집에서 자격미달로 이미 탈락된 기업에게 2차 모집 단독 재응모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업에 대한 공개평가는 교수대표(교수자치회장/전국교수노조평택대지회장), 학생대표(총학비대위원장), 직원대표(전국대학노조평택대지부장)가 불참했으나, 장기간 조기흥 전 총장 비서관을 지낸 인물, 조기흥 자녀 임용비리 관련 의혹 있는 인물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추진연대는 “임시이사회는 이씨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임용비리 및 승진비리로 밝혀진 당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면서 이사회가 이 씨에 대한 총장 직무대행 임명 철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 천막단식농성 시작

기사입력시간 : 2022/07/18 [11:16:00]

김아름내 기자



▲ 평택대사학추진연대는 18일부터 평택대 앞에서 천막단식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 평택대사학추진연대

평택대학교 사학혁신추진연대 교수진이 평택대 정문 앞에서 사학혁신을 위한 천막단식농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연대는 "평택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규모가 작은 회사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현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며 천막단식농성 이유를 전했다. 이어 "사학비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학생 학습권, 교원과 직원의 교권 및 권리가 확보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대에 따르면 평택대학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5일 대학정식이사 선임을 예고했다. 연대는 대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기여자에게 대학을 넘기려는 행동을 중단하고 공익이사를 선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영형사립대는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왔으며 선제적 재정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등록금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인터뷰] “늦깎이에 발 들인 대학민주화, 마음이 급합니다”

⋈ 대담 : 박병수 편집국장 | Ⓢ 승인 2022.07.21 01:15

신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선재원 평택대 교수 “현재 교육부로는 사학민주화 요원”
“대학교수, 안정된 직장인으로 남아서는 안 돼” 역할 강조



선재원 신임 민교협 공동의장(평택대 교수)은 “교수들은 낮은 자세로 학생들의 이야기, 사회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고, 적합한 시점을 놓치지 말고 학교이든, 종이 위에든, 사회이든간에 크게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대 사학민주화하다 맺은 민교협 인연

최근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에 선재원 평택대 교수(국제지역학부·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장)가 선임됐다. 소감을 묻자 선 의장은 “한국사회와 대학민주화에 늦깎이로 참여했다. 오랜 시간 평생에 걸쳐 바른 사회와 교육을 위해 희생한 선배들을 떠올리면, 많은 빛을 지고 산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소감보다 각오를 내비쳤다.

선 의장과 민교협과의 인연은 그가 재직하는 평택대의 재단비리가 학교자체감사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음에도 후속조치를 실행하지 않자 당시, 민교협 평택대분회장 신분인 선 의장, 평택대교수회, 민교협, 평택대정상화추구지역대책위원회 등은 교육부청사앞에서 평택대가 처한 현실을 낱알이 알린 2017년이 시작이다.

40여 년간 ‘조기흥의 왕국’처럼 운영됐던 평택대의 감사에서 튀어나온 온갖 비리는 ‘이 곳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맞나’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총학생회, 교수회라는 일반화된 대학내 자치기구를 조직하면 불법이 됐던 ‘동토의 땅’ 평택대에서 ‘민주화’라는 열매가 맺기에는 힘이 많이 딸렸다.

설립자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인 설립자 행세를 했던 조기흥 전 총장은 법의 심판으로 물러났어도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린 비리·추종세력들의 방해와 담합은 공고했다. 그들에게 선 의장은 눈엣가시였고, 결국 그들은 ‘해직’이라는 울가미를 씌여 강단에서 그를 내쫓았다. 당시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말도 안 되는 해직사유를 주장하는 구 재단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선 그대로 해직을 명령했다.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회, 일방 의견듣고 해직

선 의장은 “해직되기 전에는 ‘설마’, 그래도 나라 행정부처인 교육부가 파견한 중립적인 임시이사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설마, 한 교수를 해직시키겠어?”라고 판단했단다. “그 설마는 저를 매우 쉽게 해직시켰다. 학교의 케케묵은 비리를 꼬집어 내 공익제보를 했더니 평택대에 존재하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교수로 조작해냈다.”며 아직도 어처구니 없어 했다.

이후 민교협 등 여러 교수단체, 지역단체, 지역성당 사제할 것 없이 선재원 교수 보복해직 철회와 평택대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득달같이 꾸려졌다.

선 의장은 “제 주변의 분들이 선재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저렇게 몰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 사회의 민주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지는지를 생생히 목도했던 순간이다. 재단비리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할 때도, 해직돼서도, 그 이외에도 민교협 관계자들은 저라는

사람을 많이 아껴줬고, 지켜줬다”면서 진 빚을 꼭 갚겠다는 생각이 얼마 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선출을 받아 들이게 됐다는 속내를 말한다.

선 의장은 지난해 8월 해직을 당했지만 교원소청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해 지난 2월 복직했다.

선 의장은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이라는 타이틀은 저에게 영광 그 자체다. 오래 전부터 대학사회에서의 민교협을 봤다. 그들에게는 강단에서만이 아닌 실천, 실행에 무게를 두고 활동하는 모습이 남달랐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무거운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한편, “사회에서는 교수들을 안정된 직장인으로 바라보고, 65세 정년까지 보장되는 특권마저 가진 신분으로 보는 게 사실이라는 점에 많은 교수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에서 일방의견만 듣고 지난해 선재원 교수를 해직하자 교수단체, 시민단체들은 보복해직 철회하라는 시위를 펼쳤다. 광화문 평택대 법인 사무실앞에서 교수단체가 시위하는 모습.

“교수들, 왜 교수에게 정년보장해주는지 생각해야”

이어 선 의장은 “교수가 뭐 길래? 교수에게 왜? 안정된 신분, 정년보장이라는 나름 특권을 부여하냐고 반문할 때, ‘프로페서(교수)’ 에서 프로페스의 본 뜻인 ‘외치다’의 역할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엇을 외칠 것인지, 언제는 꼭 외쳐야만 하는지 등이 자기숙제가

돼 학생과 사회에서 좀 더 낮은 자세, 격식없는, 꾸밈없는 태도가 견지될 때, 강단과 세상에서 제대로 외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다”는 평소 생각해오던 사회, 학교와의 교수역할과 위치에 대해 밝혔다.

선 의장이 한국 대학사회의 문제에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평택대 학내 민주화가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임시이사회 체제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인가, 꼭 매각을 해야하는 것이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적합한 재정기여자 선택 등 거쳐야 할 중요 현안이 많다. 그러나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서둘러 학교 팔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에 많은 학교구성원들은 동의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선 의장은 단적인 예로 "평택대에 파견된 임시이사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학교의 중장기발전에 기준해 결정해야 하는 역할임에도 재정기여자 찾는데 오히려 더 혈안이 돼 있다던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관계자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임시이사회가 학교정관을 뜯어 고치는 무리수를 둔다던가, 5천억원이 넘는 자산총액 평택대의 고작 6%에 해당하는 3백억원대 자산총액 기업이 재정기여자로 지명되는 등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평택대에서 펼쳐지고 있어도 교육부는 복지부동"이라고 개탄해 한다.

"평택대에 공익이사 추천, 한국교육 살리는 상징될 것"



선재원 신임 민교협 공동의장

선 의장은 "사학족벌 복귀에 방관하는 교육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사회 후보 절차와 임시이사 편법경영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천막단식농성을 시작했다가 공익이사 선임운동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농성을 접고, 오는 8월 검증 안된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대로 열려 재정기여자가 그대로 굳혀지면 오랜 기간 싸워 온 평택대 정상화노력은 결국 졸속으로 막이 내려질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 평택대 구성원들이 함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다급해 했다.

선 의장은 "2017년 구성원의 천막단식릴레이 농성으로 설립자를 사칭하며 40년 가까이 사학족벌을 꾸려온 조기홍 일가를 축출했다. 조 씨와 그의 자녀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조 씨의 자녀와 친인척들은 학교의 주인행세를 쉽게 놓지 않

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와 사분위가 진정으로 평택대 정상화를 원한다면 공익이사를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 110년 전 척박한 조선의 땅에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미국인 피어슨 목사의 진정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사회와 대학민주화에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평생에 걸쳐 사회와 교육을 위해 희생한 선배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선재원 신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선 의장의 나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주 많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나이다. 그럼에도 그는 며칠 전 단식농성 천막을 쳤다. 사회와 교육을 위해 희생한 선배들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이 선 의장만의 빚일까 싶다. 선 의장이 졌다는 빚은 결코 혼자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의 채무이기에 함께 변제해야 함이 마땅할지 모른다.

■ 대담 : 박병수 편집국장 사진 : 이현신 포토그래퍼



대담 : 박병수 편집국장 pbs1239@usline.kr

저작권자 © Uslin(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 "윤석열 지지도 급락(急落), 교육부 레임덕 같은 탁상공론 심각하다"

U's Line 기획특집팀 | 승인 2022.08.05 01:54

"학부 1명 감축, 석사 1명 증원"...서울대 대학원도 모집정원에 안간힘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해도 교육부 '모르쇠'
현장 의견수렴 한 번도 없이 발표 만 5세 입학정책, 혹시 음주정책?



박순애 교육부장관

#-1 '학부 1명 감축, 석사 1명 증원', 실정 모르는 대표적 탁상공론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학부 1명 줄이면 석사(대학원) 1명을 증원이 가능하도록 대학 정원규제를 완화하는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같은 의결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일환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현장에서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발표가 나오마자 지방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대마저도 대학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행정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들어 교육부가 계획하는 정책이나 조치 등을 보면 현실과 큰 괴리가 난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직접확인해 상황의 정도를 파악해야하는데, 기껏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면서 추정한 정책들이라는 게 눈에 확 띈다"고 성토했다.

대학원 정원채우기가 쉽지 않은 탓으로는 지원자의 감소추세에다 학부와 별다르지 않는 교육·연구환경이 학부 졸업생들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있다.

서울소재 40곳 일반대학원 중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대학원은 34곳에 달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 24곳은 대학원 정원을 10% 이상 채우지 못했다. 특히 서강대 등 9곳은 정원을 30% 이상 채우지 못했다. 대학원 모집에는 수도권 대학이고, 지방대이고 상관없이 비상인 셈이다.

정원미달 사태에 존립마저 걱정하게 된 지방대의 대학원생 확보는 굳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문제는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대학원의 경우 연구보조원 대학원생이 없어도 교수가 대신할 수 있긴 하지만, 이공계열의 경우 대학원생 없이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S여대 경우 남학생이나 동남아, 중국 등 유학생을 유치해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공과대학 2020학년도 1학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입학 경쟁률은 0.87대1로 미달이다. 과정별로는 석사과정 0.99대1, 박사과정 0.73대1, 석·박사통합과정 0.84대1 등이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 미달사태는 2017학년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경쟁률이 0.89대1을 기록한 이래 2020년까지 4년 연속이다. 서울대 공대는 앞서 2018학년도 0.89대1, 2019학년도 0.90대1을 기록했다. 특히 석사과정은 경쟁률이 2018학년도 1.03대1, 2019학년도 1.07대1에서 0.99대1로 하락해 이공계 분야 연구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은 사정이 좀 다르다. 2020학년에 첫 지원자를 받았는데 6대1 경쟁률을 보였지만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신입생 모집 말고 교수 채용이라는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다. 당시 2019년 11월에 채용교수 인원은 15명이었지만 2020년 3월 개원까지 계획 교원을 채용하지 못 했다. 엄격한 겸직 제한규정과 호봉제에 얽매

인 획일적이고 낮은 보수가 글로벌 우수인재 채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외에서 일하던 AI전문가가 서울대 오면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저명한 교수가 지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자포자기 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서울대가 최근 몇 년사이 꾸준히 늘린 대학원 정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대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2016년 85.7%에서 2019년 77.2%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어느 대학보다 전폭적인 서울대마저도 연구·실험실습장비 낙후, 지도교수 부족 등 열악한 연구환경과 인프라가 대학원 진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

지방대 대학원은 학부의 정원충원 고충보다 더 심각하다. 수도권대 출신은 해외 대학원으로, 지방대 출신은 수도권 대학원으로 빠지면서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학원은 외국인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동석 경북대 IT대학장은 "국내 몇몇 대학원을 빼면 많은 지방대의 대학원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 전공은 국가산업이라 기술유출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평택대 교수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평택대 사학혁신추진연대를 꾸려 평택대의 공익이사 추천을 촉구하고 있다.

#-2 교육부, 탈선(脫線) 평택대 정상화 인지하고도 '수수방관'

평택대는 학내 문제로 임시이사회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회의 주된 임무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정이사 선임에 이르는 대학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대학정상화 방안을 놓고 더 이상 구성원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편·타당한 방법

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기본중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평택대 교수들에 따르면 A씨(임시이사장), B씨(총장직무대행 겸 대학정상화위원장), C씨(전 총장직무대행) 등을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까지 한 배경은 ▲평택대 대학정상화 추진에 구성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일방적 진행 ▲교육부의 동조 의견인 것처럼 꾸민 정상화방식 허위사실 유포 ▲임시이사회의 전 총장직무대행 정년연장을 위한 무리한 정관변경과 이에따른 부당 급여지급 ▲자격미달 인 재정기탁자 선정 등이다.

피고발인 B씨 등이 “교육부가 재정기여방식의 대학정상화 방안을 지지하고 재정기탁자 조건을 제시했다”는 식으로 퍼뜨려 구성원 설문조사에서 ‘재정기여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부와 대학정상화위원회간에는 ‘재정기여방식’으로 정상화방안에 대해 결코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발인들은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이로 인해 결국 재정기여방식으로 정상화방안이 추진됐고 재정기탁자 모집절차가 진행돼 D재단이 1순위로 선정됐지만 자격미달로 탈락시켜 이후 재정기탁자를 재모집해 5곳 지원업체중 E社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E社는 1차 재정기탁자 모집 1순위였던 D재단 보다 자산보유가 훨씬 못 미쳤지만 이사회에서 ‘100억원 이상의 통장잔고’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굳이 ‘모집기준’까지 변경해서 부적격자를 선정한 행위는 엄연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E社는 1차 재정기탁자 모집 때 1순위를 받은 D재단 보다 후순위였던 업체였고, 재모집 때는 선정 자산관련 근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수노조 평택대지회는 “교육부는 그동안 평택대교수노조 민원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관해 와 평택대 정상화가 파행에 이르게 되는데 책임이 작지 않다”면서 “결국 평택대 임시이사장·총장직무대행을 업무상배임·업무방해죄로 교수들이 직접 고발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택대 지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해서 그런 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무리한 정관변경, 대학정상화위원회의 교육부와 재정기여방식 논의 및 지지가 허위사실로 드러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감독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격분했다.



#-3 대통령 지시에 현장 의견수렴 없이 던진 '만 5세 입학'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행정부처의 탁상공론이 정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책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하면서 백지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1년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학부모들이 모인 '맘 카페', 학부모 단체와 사·공교육 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이들은 "무엇보다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초등학교 시작 단계부터 과도한 학습부담을 야기해 학습기초를 충실히 쌓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사교육 시작 시기가 앞당겨져 아이와 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예비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 지, 현장에 와서 몇 번이라도 들어보려 했다면 이렇게 동떨어진 발표는 안 나왔을 것"이라며 고질적인 탁상공론을 비난했다.

서울 성북구 예비학부모 김유진 씨는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이들의 입학연도 변경, 가족의 인생계획, 향후 아이의 학교적응 계획, 미래 교우관계, 사회 적응까지 고민하게 했다”면서 “가뜩이나 2025년부터라면 코로나19로 성장과 발육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연령의 아이들”이라며 울먹였다.

조기입학 정책반대에 앞장섰던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 12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0% 이상이 만5세 입학정책에 반대했다고 답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정책의 현실성 여부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무시가 빛은 윤석열 정부의 참극이다”면서 “대통령이 업무지시했다고 현장의 견, 교육부 입장정리 등 없이 며칠만에 정책안을 발표하는 교육부장관이라면 매우 위험스럽다. 그야말로 ‘음주 정책’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탄을 날렸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20%대 후반에서 더 떨어진다면 산적인 교육정책을 앞둔 교육부로서는 동력을 크게 잃어 일정대로 정책실현이 이뤄지는데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 했다.



U's Line 기획특집팀 news@usline.kr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대 공공성연대 "교육부 직무유기, 이사 선임 과정 감사해야"

2022-08-08 10:41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

8일 기자회견, 정식이사 선임 중단 촉구 이사 선임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 시급



8일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공성강화 역행 평택대 정식이사 선임과정에 대한 교육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제공

경기 평택대 정식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이하 연대)는 이날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공성강화 역행 평택대 정식이사 선임과정에 대한 교육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연대는 "교육부는 교수들이 부족한 정보로 문제제기한 사안만 조사하여 구재단의 교비횡령 의혹을 외면했다"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공공성강화 추진 교수들의 부당 승진 누락을 시정한 교수들을 징계조치했지만, 징계근거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불법으로 개정된 규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택대 대학평의회 외부위원 출신인 전 교육부 차관은 공공성강화 교수 대학평의원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 의문에 대해 구재단이 진행한 절차에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무리한 정관변경을 하고, 대학정상화위원회 등과의 재정기여방식 논의나 지지가 허위사실로 드러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감독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교육부는 평택대 정식이사 선임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직무유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를 비롯해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앞서 연대는 지난 2017년 천막단식농성을 통해 그간 설립자를 사칭하며 각종 비리를 일삼아 온 사학족벌 직계 가족을 축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부터는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편법적으로 밀실 인사가 이뤄졌다는 임시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798729>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먹튀 자본의 대학 장악" 평택대 공공성연대 '교육부 조사' 촉구

2022-09-19 16:40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

19일 평택대 이슈 교육부 직무유기 규탄
재정기탁자 선정 과정 불공정 의혹 제기
재정위기 왜곡해 재정기탁 택했다고 주장
공모조건, 이사 선임 절차 등에 물음표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 빚대기도
"이사 선임 중단, 철저한 현장 조사해야"



19일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평택대 공공성강화 이행 교육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일정 등으로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제공

경기 평택대의 재정기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원점 재검토와 철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이하 연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평택대 공공성강화 이행 교육부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연대는 "40년 사학독벌 지배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평택대가 평택대 자산총액의 6%에 불과한 자산규모 300억, 사원 30명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회를 비롯한 총장직무대행 등이 평택대에 있지도 않은 재정위기를 부풀려 재정기여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기탁(기여)은 사립학교가 재정 상황이 열악할 경우 자체적으로 외부 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대 수익용재산 확보율은 204%로 174개 대학 중 21위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땅의 공시지가는 640억 원(시가 1300억 원 추산) 규모다. 임금체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게 연대의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담보했던 금융기관인 외환은행이 평가절하되면서 론스타에게 헐값에 팔린 사례를 빗대기도 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전제돼야 할 평택대가 "이른바 '먹튀 자본'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연대는 이처럼 평택대가 별도 재정기탁자를 둘 필요가 없는데도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과 총장직무대행은 100억 원의 통장잔고만 제시한 소규모 기업을 재정기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총장직무대행직을 이어받은 대학정상화위원장이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1차 모집에서 자격미달로 탈락한 기업을 2차 모집에서 자격조건을 낮춰가면서까지 선정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들은 정식이사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추천한 인물들이 이사 후보로 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임시이사들과 총장직무대행은 이사 후보 명단을 구성원에게조차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미 평택대 교수들로부터 공익고발 당한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직무대행은 2020년부터 재정위기를 부풀리며 구성원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총장직무대행이 재정기탁방식을 교육부와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구성원들을 현혹시킨 결과, 재정기여방식이 추진됐다"며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재하지 않고 있어, (일부러) 용인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천된 정식이사들이 9월 26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 된다"며 "결국 교육부가 지원해온 평택대 공공성 강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피해는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들에게 오롯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교육부는 불공정한 평택대 정식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며 "원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택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평택대 문제는 교수단체와 학교 측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평택대 이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선재원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집행위원장 모습.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제공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를 비롯해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맹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앞서 연대는 지난 2017년 천막단식농성을 통해 그간 평택대 설립자를 사칭하며 각종 비리를 일삼아 온 사학특별 직계가족을 축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부터는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재정기탁 절차를 교육부와 논의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임시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옛 재단의 교비횡령 의혹도 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819613>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대 학교법인 "재정기탁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 반박

2022-09-20 18:13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

20일 보도해명자료 통해 반박
재정기여 방식 절차 정당성 강조
학교 재정 위기 사실 관계 설명
대기업 계열사로 '먹튀' 주장 과도
업체·이사후보 연관 의혹엔 즉답 無



평택대 전경. 평택대학교 제공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경기 평택대 재정기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학교법인 측이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전날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인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법인 측은 평택대가 재정기탁(기여) 방식을 채택한 배경과 관련해 "'평택대에 있지도 않은 재정위기를 부풀렸다'는 (공공성 추진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평택대 2021년도 이사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입학정원 감소 및 인건비 상승, 외국인 학생 감소, 정부 재정지원사업 탈락 등의 사유로 2022년도부터 매년 30억 적자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대학의 법인은 재정난 극복의 일환으로 각 대학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정상화위원회를 발족해 구성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거쳐 약 80%가 '재정 기여형 이사 제도 방식'을 도입하자는 결론을 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재정이 어렵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해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관리돼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각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주요 학교 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일반인에게 분양돼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데다, 교육부의 매각 허용 법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기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해서도 "재정기탁자로 선정된 (주)샘앤파크스는 본 대학의 재정기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자격 조건들을 갖춰 심사를 받았고, 본교 대학정상화위원회가 온오프라인 평가회로 검증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기업인 SECO그룹의 계열사로, 이른바 '먹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피어선기념학원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추천한 인물들이 (평택대) 이사 후보로 선출된 것 아니냐'는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의 의혹 제기에 관해서는 "일부 정이사후보들 중 재정기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연관성 있는 (계열사 등) 인물이 있는 걸로 알지만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대 재정기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원점 재검토와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820335>

평택대 공공성연대, '정이사체제 현안' 토론회 개최

2022-12-13 16:12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

일반이사 선임도 내부에 개방돼야
옛 재단 친인척·측근 주요직 격리
정이사체제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지난 12일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가 평택시민재단 시민의 공간에서 '정이사체제 출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성연대 제공

13일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이하 공공성연대)가 전날 평택시민재단 시민의 공간에서 '정이사체제 출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평택대 정이사체제 출범을 점검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상지대 김명연 교수(기획처장)는 최근 일반이사에 관한 상지대 법인 정관 신설 규정을 사례로 들어, 개방이사 만이 아니라 일반이사 선임도 구성원을 비롯한 학교운영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개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대 선재원 교수(공공성연대 공동집행위원장)는 정이사체제가 정상화되려면 옛 재단의 친인척과 측근을 주요 보직에서 격리시켜야 하고, 지난해 12월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협의회, 시장, 시의장 추천 각 1명과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자인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전 평택대 대학평의원)은 평택대의 정이사체제가 출범했지만, 이익 추구 세력에 대한 감시기능은 부족하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위원장(평택비정규센터장)은 동문과 지역민들이 '대학다운 대학 만들기'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이번 토론회에는 평택대 소속 박정아 사회복지학 박사, 하태원 민주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졸업생 이예은씨와 오명근 전 평택대 총동문회장, 전진규 전 경기도의원, 최성일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평택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864041>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대’ 구성원들 이사장의 꿈수 총장 공모에 발끈

기사입력시간 : 2023/01/09 [09:56:00]

추광규 기자



▲ 평택대 자료사진 (사진 = 신문고뉴스)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이 지난 1월 4일 총장 공모방식을 공지한 가운데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혁신 서약 위반일뿐 아니라 구재단 측근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평택대학교 사학혁신추진연대(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 평택대학교 교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평택대분회, 평택대학교 민주총동문회)는 1월 9일(월) 사학혁신 서약을 위반한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의 꿈수 총장 공모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2021년 6월 이사회가 동의했고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실시된 총장선출제도 설문조사에서 평택대 학생, 교수, 직원 절대 다수가 직선제에 찬성했다”면서 “평택대는 2022년 3월 대학규정과 법인정관을 개정하고 총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사학혁신지원사업 계획을 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부)에 제출했다. 평택대 현 이사들을 추천한 세코그룹은 사학혁신지원사업 수용을 서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계안 이사장은 핵심적인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총장선출방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모제를 공지했다”면서 “더욱이 공모방식이 구재단 측근이었고 이사후보 추천에 관여한 교수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진연대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즉 “이계안 이사장은 이사 선임과정과 의무이행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이것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학교법인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사학혁신지원사업 수행 중인 대학법인의 조치로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대학노조 평택대지부는 재정기탁자 선정과정과 대학평의회 이사후보 추천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재정기탁자 선정과정을 책임졌던 전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1월 5일 혼탁했던 재정기탁 공모과정을 폭로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계안 이사장이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설치한 ‘평택대학교 대학정상화위원회’의 회의록, 자신의 이사선임과 관련된 재정기탁자 선정과정, 재정기탁자 의무이행 사항인 재정입금 내역의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선임과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는 총장공모방식이 이사후보 추천에 관여한 교수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이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사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실시를 촉구했다.

즉 “이계안 이사장은 취임 한 달 만에 법인 운영 주요 정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면서 “상근 이사와 직과 재정, 노무, 수익사업 등 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인사무국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학혁신지원사업 핵심내용인 구성원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한 민주적 학사운영과 거리가 멀고, 학사행정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더욱이 총장임기를 4년 중임에서 직무평가를 통한 3년 중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사는 직무평가 없이 4년 중임으로, 이사가 학사에 개입해도 총장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구성원에게 보낸 이계안 이사장의 첫 공개서한에서 고등교육기관 수장으로서의 교육이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길이 없다. 공개서한에서 이상한 점은 이사장 취임 몇 달 전부터 평택대의 ‘쓰임’에 대해 고뇌했다고 밝힌 점”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이계안 이사장은 총장공모방식이 이사회 추천에 관여한 교수들을 겨냥했다는 의혹과 일방적 행보로 점령군 같다는 구성원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면서 “의혹과 불신을 없애려면, 구성원이 구재단을 몰아내고 합의를 도출한 총장직선제가 가능하도록 대학 규정과 법인정관을 개정하고, 신속히 직선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평택대 선재원 교수 징계 추진 ‘의견 대립’

✎ 허훈 기자 | ☎ 승인 2023.03.29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 3월 28일 규탄 기자회견
선재원 교수 “보복성 징계” 법인 “사실무근” 대립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가 지난 3월 28일 평택대학교 정문 앞에서 ‘공공성강화 역행하는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기망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이날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해묵은 사유로 선재원 교수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이중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앞에서는 혁신과 비전, 공공성과 화해, 협력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지난 임시이사들이 중단한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려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고 밝히며, “선재원 교수는 민교협 상임공동 의장과 전국교수노조평택대지회장을 맡아 대학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평택대의 대표적 교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속 좁은 독단행정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선재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 보복행정을 막아 내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평택대가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열정 어린 실천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는 “이계안 이사장과 학교 발전에 대해 두 차례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난 3월 20일 갑자기 징계위원회 출석 요청을 받아 당황스러웠다”며, “대학 관련 공익적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명목으로 징계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학교에서 비공개 처리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출불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이외에도 규정 위반 등 몇몇 안건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라며, “왜 징계를 받는지 근거를 알지 못해 방어권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징계사유서에 그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대학교는 추후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재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훈 기자 ptsisa_hoon@daum.net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대공공성연대, "정보공개청구 묵묵부답 이사장-총장, 즉각 사실을 밝혀라" 촉구

✎ 정다연 기자 | Ⓞ 승인 2023.07.11 17:28

정보공개청구 주도 선재원 교수 보복성 중징계 규탄...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이하, 공공성연대)는 7월 10일(월) 평택대 정문에서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U's Line 유스라인 정다연 기자]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이하, 공공성연대)는 7월 10일(월) 평택대 정문에서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성연대는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이 현 이사회 구성관련 및 세금으로 운영된 사업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선재원 교수에 대해 지난 6월 23일에 보복성 중징계(정직2월)했다고 밝혔다.

이계안 이사장이 거부한 정보공개사항은 자신이 이사장이 된 이사회 구성 관련해 1.이동현 현 총장이 위원장으로 재정기탁자 선정을 주도한 대학정상화위원회 운영자료 2.재정기탁자 모집 공고로 접수된 자료 3.재정기탁자의 기부내역 4.상임이사 겸직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보수내역 등이다.

또한 이동현 총장이 거부한 정보공개 사항은 자신이 단장을 했던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사업 (2017-2020) 관련해 1.기자재구입비, 사업단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사업추진위원회운영비 지출결의서, 2.사업추진, 협약기업 개별면담, 교육과정개발 회의록, 3.산업체와의 워크숍 보고서이다.공공성연대는 대학의 민주성, 책무성, 공공성을 짓밟고 퇴행의 기득권 강화로 가는 평택대의 행태를 바로잡아 선재원 교수를 지켜내고, 평택대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평택대가 사학족벌 왕국에서 왕처럼 군림한 전 이사장 조기 흥이가 작고이후에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이 바꿨다하지만 여전히 조 전 이사장의 측근들이 학교를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조기흥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며 "사학비리로 점철된 평택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감독기관 교육부도 사람만 바뀐 평택대의 실태에 결코 자유롭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정다연 기자 dy-holic@usline.kr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대·피어선법인-선재원 교수 중징계 '갈등 심화'

✎ 허훈 기자 | ☎ 승인 2023.07.12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 7월 10일 규탄 기자회견
선재원 교수 중징계 규탄, 법인 "적법한 징계" 주장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가 지난 7월 10일 평택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대학교의 정보공개 거부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규탄했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이계안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과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은 이사회 성립과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정보공개를 주도한 선재원 교수를 보복성 중징계했다”며,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후안무치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가 이계안 이사장에게 공개 요청한 정보는 상임이사 겸직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보수내역 등 평택대 현 이사회 성립 관련 자료다.

또한 이동현 총장에게 공개 요청한 정보는 기자재구입비, 사업단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사업추진위원회운영비 지출결의서 등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사업 관련 자료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구성된 현 이사회 체제에서 이전에 없었던 지출이 추가로 발생했다. 상임이사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보수, 이동현 총장의 인상된 수당”이라며,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이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현 이사회 성립 과정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사업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택대학교가 선재원 교수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서도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이번 징계는 2기 임시이사회가 중단한 징계를 이계안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것으로, 평택대는 6월 23일 선재원 교수에게 중징계인 정직 2월을 통지했다”며, “선재원 교수는 인권센터 업무에서 발생한 책임 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생활협동조합 업무 건은 직원의 협조로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명예훼손 건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공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대학 민주화 흐름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졸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재원 교수 탄압을 막아내고 평택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단 없는 실천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요청한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신한 바 있다”며,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가 요청한 네 가지 사안은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과 개인정보·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재원 교수에 대한 징계는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며, “선재원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은 관련 법령과 규정, 조사 결과, 당사자 소명,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판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적법하게 이행됐다. 선재원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허훈 기자 ptsisa_hoon@daum.net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활비처럼 중요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고지원사업의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해 경영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 총장은 이사회 구성과정과 국고지원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 강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성연대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를 비롯해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천막단식농성을 통해 사학폭별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투쟁·고발 등을 해오고 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040993>

"평택대, 이사회 구성과 국고 사업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사입력시간 : 2023/11/27 [14:23:00]

이재상 기자



▲ 27일 오전 피켓팅이 평택대 정문앞에서 진행됐다. 사진 제공 = 공공성연대

[신문고뉴스]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이사회 구성과 국고 사업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내외 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 등 두 사람이 공공성 강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새 부대의 평택대에 새 술이 아닌 썩은 술을 붓고 있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이하 공공성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 11월 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계안 이사장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여, 이사회 구성과 국고 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노컷뉴스 2023.11.6.). 11월 15일까지 성실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대 대학본부는 공공성 연대의 신의에 입각한 정보공개와 집행위원장 선재원 교수에 대한 탄압중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비공개'로 언론사에만 알렸다(노컷뉴스 2023.11.22.)"면서 "땃땃하지 못한 내용을 배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수연구자단체, 지역 시민, 평택대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공공성 연대는, 허위사실을 정정하며,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감추는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연대는 이어 "이동현 총장은 국고 사업 내역을 반복하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동현 총장은 2017~2021년도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일명 링크플러스 사업), 2021~2022년도 사학혁신지원사업 단장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공공성 연대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두 사업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동현 총장은 경영 비밀 등의 이유로 두 국고 사업의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성 연대는 행정심판을 통해 두 국고 사업의 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했다"면서 "링크플러스 사업 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에서 패한 이동현 총장은 과도하게 삭제한

일부만을 공개했다. 이동현 총장이 거부한 사학 혁신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공개 대학본부 입장문은 국고 사업 핵심의혹을 해명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1월 6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성 연대는 실제 집행내역을 공개한 2017년도 지출 결의서 내용에 대한 핵심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11월 22일 입장을 '비공개'로 발표한 평택대 대학본부는, 공공성 연대의 공익적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반박했으나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연대는 "공공성 연대가 제기한 의혹은 첫째, 지출결의한 날짜는 공개했으나 실제 집행 정보를 삭제한 이유, 둘째, 지출결의가 연도 말 이틀에 집중된 이유, 셋째, 공개한 지출결의서 총액과 실제 집행총액과의 차액 발생 이유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실제 집행 정보를 삭제한 2억9천만 원은 기계 기구구매비 총액의 40%에 해당한다. 둘째, 2018년 2월 26일, 27일에 지출된 결의금액이 3억5천만 원으로 2017년도 집행총액의 47%에 해당한다. 셋째, 보고된 실제 집행총액 737,592,829원 보다, 제출받은 지출결의 총액이 3천여만 원(32,672,430)원 적은 704,920,399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동현 총장이 단장을 맡았던 국고 사업의 결과를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한 '실제 집행총액'과 공공성 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하고 공개한 '지출결의 총액' 차이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계안 이사장은 정보 비공개로 교수의 소청 권리를 박탈했다"면서 "이계안 이사장은 늑장 정보공개로 집행위원장 선재원 교수의 소청(교원소청심사위원회) 권리를 박탈했다. 따라서 선 교수는 소청을 거치지 못하고 부당징계(정직 2월, 2023년 6월~8월)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 교수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계안 이사장은 징계통지 후에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징계통지 후 소청 신청 기한인 1개월을 넘겨 이사회 회의록 등 일부 자료만 공개했다.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아직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성연대는 "집행위원장 선재원 교수는 소청에 필요한 정보를 이계안 이사장이 '비공개'하여 교원지위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박탈된 것"이라면서 "반복된 비공개 교내 신고로 집행위원장 선재원 교수를 징계했다. 선 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교내 법무 감사팀에 10번에 걸쳐 반복한 익명의 '비공개' 신고로 추진되었다. 주요 신고내용은 구재단의 비리를 알리는 선 교수의 언론 기고 등 공익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째, 구재단이 ICT공학관을 신축할 때 낮은 이자율이 가능한 담보대출이 아닌 높은 이자율의 신용대출을 채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허위사실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인종합감사 결과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둘째, 이동현 총장이 임용할 때와 승진할 때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는 공익 목적의 언급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셋째, 설립자 행세한 구재단 이사장이 교비 횡령 등으로 실형 선고되었다는 공익 목적의 언급을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했다. 이것은 구재단을 옹호하는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방증이 된다"고 말했다.

공공성연대는 "이계안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절차 하자'를 알고도 징계했나?"라고 따지면서 "선 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2기 임시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 의결은 정족수 미달의 절차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사 정수 9인 중 5인이 찬성해야 적법한 의결이었으나, 당시 이사회에는 5인만이 출석했고, 출석한 5인 이사 중 이사 1인은 징계의결을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명예훼손 징계에 대한 이사 간에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의견이 대립되어, 변호사인 이사가 법원에서는 사실

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에 선 교수에 대한 징계 관련 논의는 최종적으로 '징계의결' 아닌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는 이동현 현 총장과 현 법인 직원이 절차 하자가 있었던 집행위원장 선재원 교수 징계의결 당시의 2기 임시이사회에 참석했는데도 이계안 이사장이 징계를 시행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이계안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 이동현 현 총장이 위원장으로 재정기탁자 선정을 주도한 대학정상화위원회 운영자료, 2. 재정기탁자 모집 공고로 접수된 자료, 3. 재정기탁자의 기부내역, 4. 상임이사 겸직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보수내역. 이동현 총장은 국고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성연대는 이같이 촉구한 후 "공공성 강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새 부대의 평택대에,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이 새 술이 아닌 썩은 술을 붓는다면, 좌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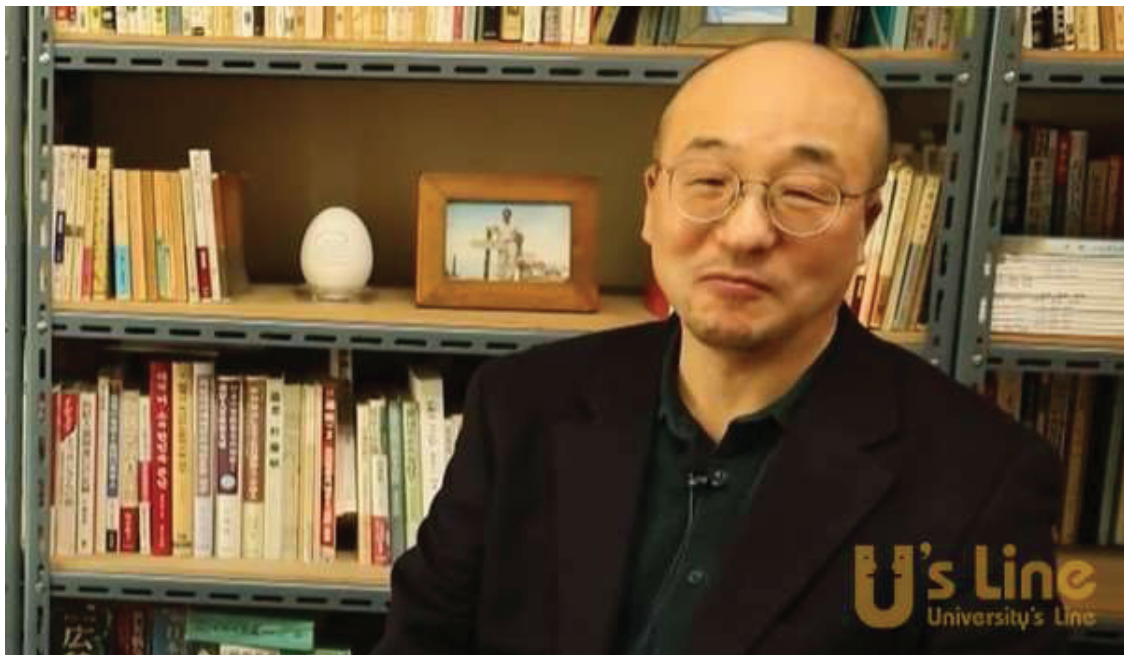
한편 공공성연대는 27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오전 8시 30분~오전 9시 까지 30분 동안 평택대 정문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한다. 첫날인 27일 아침 피케팅에는 공성경 공동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공공성연대에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가 함께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인, 징계권남용 불감증 '심각'...선 교수, 평택대와 3년간 싸움 소청위재심 최종승소

✎ 박병수 기자 | ㉠ 승인 2024.05.08 04:18

2021년 해임통지 받은 후 만 3년 걸려 해임처분 취소 '종지부'
사립학교법인의 징계범위 제한소청위 결정불복 행정소송 금지 등 거론
선재원 교수 "온갖 비리故 조기흥 명예이사장 살아온 듯한 느낌"



▲선재원 평택대 교수(국제지역학부 경제학, 민교협 상임공동의장)가 학교법인 평택대와 지난한 3년간의 법적싸움을 마치고 소청위 해임처분취소 최종승소를 했다. 최근들어 사립학교법인의 징계권 남용이 심각해 시민단체들은 22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이주호 체제, 사립학교법인 징계권 남용 급증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사립 학교법인 징계권 남용이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이유로 법인의 징계권이 내부구성원 통제무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대책으로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가 늘 제시되지만 현장과의 접목은 동 떨어져 있다. 특히, 윤석열-이주호 체제에 들어서는 사

립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는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사학 재정악화 측면이 강조돼 더 후퇴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우려가 최근 대학사회에서 또 등장했다.

평택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이 대학 선재원 교수(국제지역학부 경제학·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의 개인적 문제를 빌미로 해임처분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결정을 했다. 소청위의 해임취소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도 평택대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소청위가 최초 해임취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청위, 해임처분취소결정 유지

평택대 학교법인은 행정법원 결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2023년 11월, 원심취소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지만 소청위 결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청위 최초결정의 법률적용 흠결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지난 4월 17일 소청위는 특별한 추가심리 없이 2심결과를 지난 3월에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심을 열어 해임처분취소를 유지하는 최종결정을 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2021년 8월 평택대 학교법인의 선 교수 해임처분 통지로 시작돼 거의 만 3년 지난한 과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학교법인과 맞서 온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공공성연대)의 선재원 교수는 **현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이 이사회 구성과정과 보수지급을 포함한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이사장은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했다.**

“이계안 이사장의 보수책정 근거·절차 공개하라”

선재원 교수는 피켓팅 시위를 벌이면서 교육부에 이계안 이사장 관련내용을 질의했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상임이사 보수액 책정관련 근거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상임이사(이사장)의 보수를 책정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사장의 '셀프 보수지급'에 대해 시정명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이 이사장은 의결되지 않은 선재원 교수에 대한 해임징계를 불법집행했고 관련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해 소청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공공성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뜬금없이 보복성 중징계 명예훼손으로 돌아왔다”고 항변 했다.

선 교수에 따르면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고 학교의 장(長)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고집고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에 따라 이계안 이사장의 이사승인 취소를 1인 시위로 거듭 촉구해 왔다.

이 같은 현안을 두고 사립 학교법인과 구성원간 갈등은 연간 100여건이 접수된다. 2013년 이후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21.8%에 불과하고,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극소수에 불과해 사립학교법인은 죄를 짓고도 제대로 죄값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법인과 3년 가깝게 부정(不正)을 다뤄온 선재원 교수는 “고등교육기관 ‘대학’현장에서 ‘교수’라는 직분은 지식 전달자만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는다. **역할을 인식하고 공명정대한 대학으로 바로 서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 싸움을 해 학교 죄를 드러내도 학교현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한국 대학사회 현실”이라며 한국 대학의 미래를 걱정했다. 선 교수는 조기흥 전 명예이사장은 이제 학교에 없는데, 마치 아직도 조기흥 명예 이사장이 살아 돌아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민교협, ‘선재원 교수 사건’ 관련 불법적 요소 고발

선재원 교수 평택대 학교법인과 소송건에 대해 민교협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수를 상대로 한 학교법인의 송사를 활용한 전횡, △학교법인이 사용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불법적 요소, △일부 법무법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위반을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학교법인의 소송남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기적으로 학교법인의 소송가능한 항목을 제한하고 학교법인이 패소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처럼 사립학교에서도 소청위 결정에 학교법인 행정소송 자체를 금지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동출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은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학부모가 담당해야 하는 수입액(수업료, 원비) 역시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적 수입액에 포함된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이다. 교육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 **도진영 신경주대 교수직원노조위원장**은 “국회가 나서야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 교육부장관의 명의로 개정가능한 시행령 및 규칙개정은 40일간 공고 이후에 즉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실성 없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도 즉시 실현 가능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cookie ment -3년간 피켓시위 한 선재원 교수가 진정 바랬던 것은?

평택대는 故 조기흥 명예이사장 살아서는 ‘조기흥 왕국’이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따라 다녔다. 대학이 누구의 왕국이라는 비유는 대학시스템이 특정인 누구의 뜻에 좌지우지된다는 뜻을 내포한다. 대학이 특정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은 사실상 자유, 정의, 진리를 주창하는 대학 정신과 거리차는 물리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낮과 밤같은 차이다.



▲대학정문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는 선재원 교수

故 조기흥 전 명예 이사장은 수십년간 자신이 학교 설립자로 행세했다. 사실상 조 명예 이사장은 피어선기념학원 평생월급장이어야 맞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잇속(이권)챙기기에 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설립자로, 왕으로 군림했다. 그의 가족과 친인척으로 학교를 채워 나갔다.

대학에 가족, 친인척이 드글드글한 형태는 비리사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유는 숨길 일이 많아지는데 일반인보다 가족, 친인척이 동질감이 소속감이 나아 한 배를 타는 경우가 많고, 평택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평생 학교에

서 군림했던 조기흥 명예 이사장이 사망했지만 학교는 바뀐게 하나도 없다. 너무도 신기한 일이다. 마치 조기흥 명예이사장이 살아돌아 온 듯하다. 새로운 재정기여자가 등장했어도 학교를 운영해가는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다.

어쨌거나 가장 큰 주제는 조기흥 씨가 평택대에서 수십년간 군림하면서 대학은 얼마나 발전했는가이다. 교육과 연구를 두 축으로하는 대학본연의 스탠스는 이렇다할게 없다. 평택대 소유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자들은 나름 발전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타 대학과의 격차로 따지면 발전했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못하리라 본다.

평택대의 새로운 재정기여자 비전은 무엇인가 듣고 싶다. 구 재단이 떠나고 새로운 재정기여자가 왔다하지만 그 밥의 그 나물처럼 보인다. 별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다. 선 교수가 학교법인과 3년 가까이 마찰을 빚은 것은 평택대가 얼마나 학교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냐고 묻는 1인 피켓시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들 평택대에 대해 나물라라 할 때, “평택대, 더디 가더라도 똑바로 가자”고 구성원들에게 외쳤던 소리가 들어있겠다 싶다.

3년간 피켓시위로 선재원 교수가 개인적으로 득을 본 것은 무엇일까. 없다. 아무 것도 없다. 굳이 있다하면 자신이 몸 담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보다 학생들은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교수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고, 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위한 것이라면 간, 쓸개 다 빼주는 그런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었을 지는 모르겠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